

한은, 기준금리 낙달째 1.25% 동결

“급증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 ·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이 금리인하에 부담으로 작용”

한국은행이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10월 기준금리를 현 1.25%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로써 한은은 지난 6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25%로 끌어내린데 이어 4개월 연속 동결을 결정했다.

한은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묶어둔 것은 여전히 가계부채 문제에 별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인 지난 12일 한은이 발표한 '2016년 9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에 비해 6조1000억원 증가한 688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전월에 비해 증가세가 다소 꺾이기는 했지만, 9월 기준 2008년 통계편제 이후 두 번째로 높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5조3000억원 늘어난 517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2008년 이후 9월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지난 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소속 국회의원들은 일제히 가계부채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한은의 금리인하 정책을 비판했다. 의원들은 특히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정책이 경기 회복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기 보다는, 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만 키웠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나날이 커져 가고 있는 미국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도 한은의 통화정책의 운신을 좁히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현실화되면, 내외 금리차 축소로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댄싱머신으로 변신한 휴머노이드

2016 경기과학기술대전이 열린 13일 오후 경기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참가 학생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춤추는 모습을 관람하고 있다.

자본이 대거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 한은은 금리인하에 더욱 신중하고 보수적인 수밖에 없다.

당초 금융시장에서도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했다. 지난 11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채권 시장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98명이 기준금리가 동결을 예상했다고 밝혔다.

동결 전망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것은 성장둔화 우려가 있지만, 여전히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과 급증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 등이 금리인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9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열린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을 만나 기준금리 동결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를 나흘 앞두고 나온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금리인하 여력(room)’ 발언에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세계 상위

권에 꼽힐 정도”라고 되받으며 사실상 ‘인하 불가’를 의했다.

이 총재는 “지금까지의 완화정책 결과 자산시장, 부동산 시장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안정 리스크가 너무 많이 커져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강력하게 금리를 안 내리겠다는 말은 아니지만 여력은 제한적”이라며 “금융안정리스크를 감안할 때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금리인하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뉴시스

“로봇부품 국산화 사업 예산 매년 감소”

조배숙 의원, “부품 국산화 포기하면 주도적 산업 발전 못할 것”

로봇산업 육성과 로봇 강국으로의 도약이라는 정부의 목표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익산을)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2010~2014년 로봇산업실태조사 결과 기준, '15년 실태조사는 진행 중)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0년~2014년) 로봇부품의 국산화율은 2010년 59.4%, 2011년 49.4%, 2012년 51.2%, 2013년 46.1%로 50% 수준에 머물다가 겨우 2014년에 들어서 61.4%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로봇부품 수입현황은 2010년 617억, 2011년 1800억, 2012년 1600억, 2013년 2300억, 2014년 2000억 가량으로 증가추세이며, 특히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2012년 82.4%, 2013년 86%, 2014년 47%로 최근 급격히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주요 국가 중(일본/독

일/스위스/프랑스/미국 등) 대일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산업기반이 취약한 로봇핵심 부품을 집중지원 함으로써 대규모 수요 창출과 국산화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로봇부품보급사업’ 예산은 2013년 15억, 2014년 12억, 2015년 11억, 2016년 7억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로봇부품보급사업 자체가 생색내기 일 뿐, 로봇부품 국산화를 제고에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는 지적이다.

조배숙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로봇산업 육성 바람이 불고 있는 만큼, 시대적 흐름에 맞춰 국내 로봇산업의 내실화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며, “부품 국산화를 포기하면, 일본 등 부품 선진국들 사이에서 주도적으로 산업 발전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익산=장영민 기자

현대차 전주공장, 기능장 20명 추가 배출

하반기 시험 합격... 2개 부문 김영일 씨 · 56세 전성우 씨 등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20명의 기능장을 추가 배출했다.

2016년 하반기 국가기술자격시험 결과 이 회사는 상용생산관리부 김영일 씨가 용접과 에너지 2개 부문에서 기능장에 합격한 것을 비롯해 총 20명이 용접, 배관, 위험물, 제강 등 7개 부문에서 21개의 기능장 타이틀을 획득했다.

상용소재부 전성우 씨는 56세 늦깎이로 주조 부문 기능장 타이틀을 획득함으로써 이 회사 내 최고령 기능장 합격자 기록을 세웠다.

이번 기능장 추가 배출에 힘입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총 75명의 기능장을 보유하게 됐으며, 전체 기능장 타이틀 수는 총 113개로 늘어났다.

이 회사는 기능장 수가 증가하는 것

과 비례해 주력 생산품목인 중대형 상용차의 제품 품질이나 완성도 등 대외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이렇게 많은 기능장을 배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최초로 주간 연속 2교대 근무제를 도입한 걸 계기로 회사가 여가시간 활용 차원에서 직원들이 자기계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분석된다.

또 기능장, 품질명장 등 각종 국가 자격증을 앞서 획득한 선배 직원들을 중심으로 한 사내 스터디 모임도 활성화되어 관심 있는 동료 및 후배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것도 큰 힘이 되고 있다. /원주=이종복 기자

신용평가가점제 시행 8개월... 신청 인원 4만 7천여명

신용평점 상승 4만533명 · 등급상승 3899명... “0.05%도 해당 제도 활용 안해”

김관영 의원 “금감원은 금융취약계층 신용등급상승 방안 다각도로 마련해야”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시행한 신용평가가점제(비금융거래정보) 실적 이 전체 8만건(인원 4만737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부위원회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용평가가점제 시행현황’ 자료(2016년 1월~8월)에 따르면 올해 총 8만 건이 접수되어 4만533명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이중 3899명은 등급상승으로 이어졌다.

반면, 신용평점이 하락한 인원은 2656명이고 등급까지 하락한 인원은 162명이다.

신용평점이 하락한 원인은 비금융거래정보 서류 제출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납부실적을 다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용등급 상승인원도 4~7등급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금융정보 반영 후 신용등급이 상승한 인원 3899명 중 4등급에서 7등급 신용등급보유자가 72.9%에 달했다.

이중 6등급에서 5등급으로 신용등급이 상승한 인원이 1145명(29.4%)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신용평가가점제는 그 효과

에 비해 제도 이용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정보가 부족한 자 중 0.05%도 해당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국민 대부분이 이용하고 있는 ‘통신요금 납부실적’의 경우 점수를 우편 등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제도를 활용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비금융거래정보 유형별 점수 현황을 보면 건강보험이 3만 2790건(41%), 국민연금 3만 2168건(40.2%), 통신은 1만 1111명(13.9%)이다.

건강보험 · 국민연금 납부실적의 경

우 신용조회회사(CB)를 통한 간단한 동의 절차만 있으면 신용평가에 반영된다.

김관영 의원은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상승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취약계층의 이자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서라도 신용평가가점제는 확대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용평가가점제는 금융소비자가 신용등급 개선을 위해 통신 · 공공요금 등 비금융정보 성실납부 실적을 신용조회회사(CB)에 제출하고 신용평가사 가점을 받는 제도이며, 대학생 ·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실적이 거의 없는 약 930만명의 금융취약계층이 주 대상이다.

/군산=문정근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